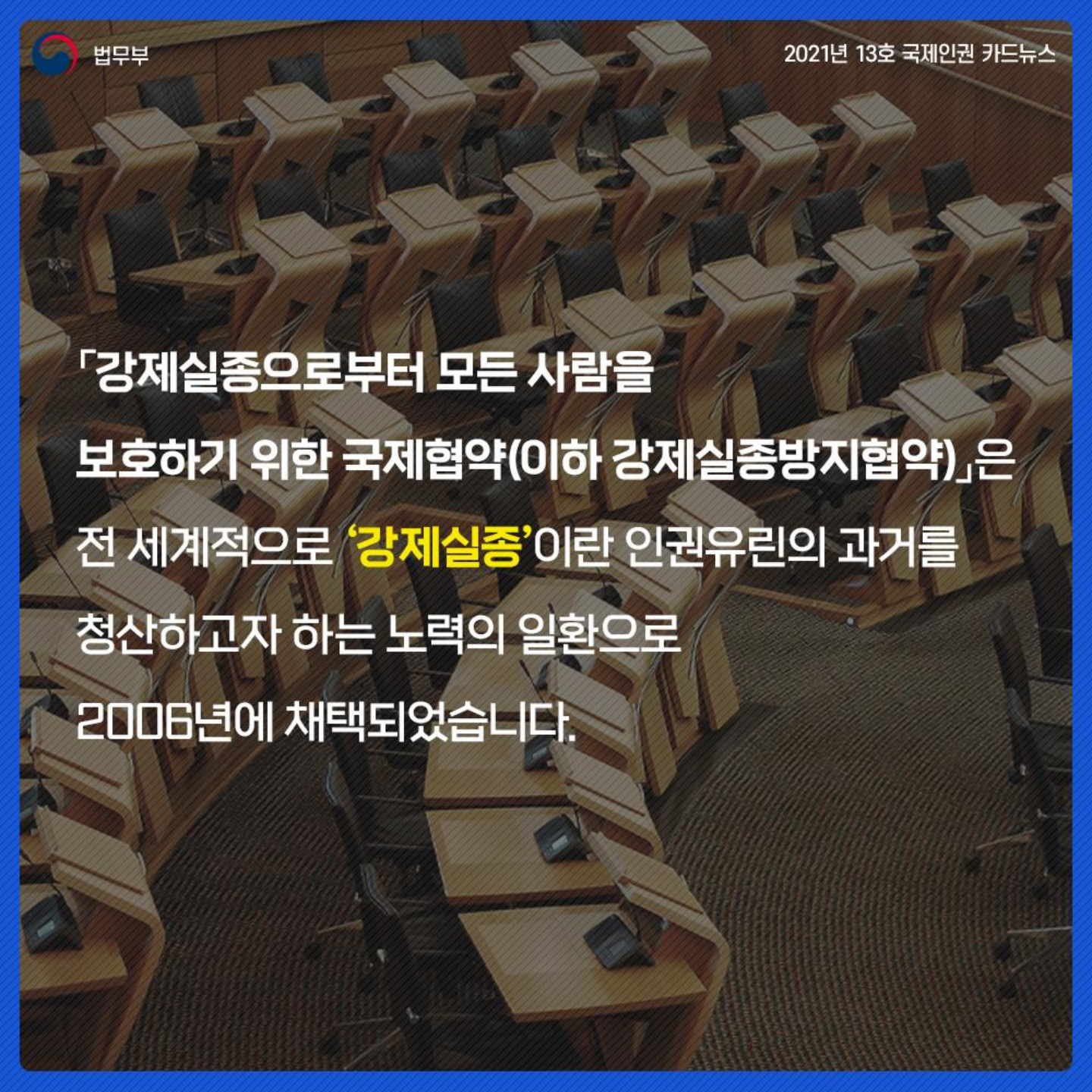


- 인권주간 특집 ① -



**대한민국 정부,  
강제실종방지협약  
가입 추진**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이하 강제실종방지협약)」은  
전 세계적으로 ‘강제실종’이란 인권유린의 과거를  
청산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2006년에 채택되었습니다.

**강제실종**이 역사적으로 국가폭력의 수단이었던 사건들이 밝혀지면서, 이에 대한 처벌과 방지에 대한 국제인권법상의 기준 정립과 대응이 강구되어 본 협약이 마련되었습니다.



1941년

**히틀러의 '밤안개 정책'**  
(Nacht und Nebel Erlass)

출처 : Roden Dimitri (기관: ERM)



1970년대 중반

**남미국가들의 강제실종사건**  
( 'desaparición forzada' 'desparecer a alguien' )

출처 : Marco Peláez

우리나라에서도 **강제실종**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2019. 8. 7. 오마이뉴스

## “유해라도 찾아주세요” 유엔에 진정서 낸 일제 강제동원 유족들

일제강점기 사할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유엔(UN) 인권이사회 산하 '강제적·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싼트그룹(WGEID)'에 진정서를 제출해 강제실종 상태의 해결을 호소했다. 일본이 일제강점기 불법 강제동원과 싼트그룹(WGEID)에 진정서를 제출해 강제실종 상태의 해결을 호소했다. 일본이 일제강점기 불법 강제동원과 싼트그룹(WGEID)에 진정서를 제출해 강제실종 상태의 해결을 호소했다. 일본이 일제강점기 불법 강제동원과 싼트그룹(WGEID)에 진정서를 제출해 강제실종 상태의 해결을 호소했다.

2020. 5. 31. BBC

## 형제복지원: 40년 전 부산에선 무슨 일이 있었나 평범했던 삶이 무너졌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이른바 과거사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였다. 한종선 씨는 방청석에서 표결을 지켜보며 울었다고 했다. 그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생존자다.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을 앞둔 1980년대 초반 '사회 정화' 명목의 부랑자 단속은 전두환 정권의 주력 사업이었다.

**강제실종**은 강제적 혹은 비자발적(involuntary) 실종, 의문사, 자의적 구금(arbitrary detention), 비사법적 처형(extrajudicial executions) 등 다양한 맥락에서 적용되며, **일종의 인권침해 유형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강제실종방지협약 제2조

이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강제실종”은 당사국의 요원 혹은 당국의 허가, 지원 혹은 묵인 하에 일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의한 체포, 구금, 납치 혹은 모든 형태의 자유 박탈과 뒤이어 그러한 자유 박탈을 인정하기를 거부하거나, 실종된 사람의 생사 또는 행방을 은폐하여 이러한 사람을 법의 보호 밖에 두는 것으로 간주한다.



A stylized blue handwritten signature.



**‘강제실종’이란, 국가기관에 의한 실종으로,**

- ① 실종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실종자의 정보가 실종자의 가족이나 대리인들에게 접근이 차단된 점
- ② 가해자·책임자들의 수사 및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9대 주요 **국제인권협약\*** 중 하나인  
「강제실종방지협약」에 가입하게 되면,  
협약을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9대 주요 국제인권협약이란?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규약, 인종차별철폐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고문방지협약, 아동권리협약, 장애인권리협약, 이주노동자권리협약\*, 강제실종방지협약\*을 뜻합니다. (\*우리정부 미가입)

「**강제실종방지협약**」은 국가에 의한  
강제실종범죄를 방지 및 처벌하기 위한 협약입니다.  
본 협약 가입으로 **인권 존중을 증진**하고  
**국제사회의 강제실종 근절 노력에 동참**하게 됩니다.

법무부는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적 실현을 위해  
「**강제실종방지협약**」의 가입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편에는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 추진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